

광주·전남 지하 588가구...지자체 현황 파악·재난 대응 전무

지하·반지하 광주 247가구·전남 341가구
 지자체, 지하층 실 거주·용도 파악 안 해
 낮은 현황 파악...“침수 대응 매뉴얼 마련”

2년 전 광주·전남 지하 주택이 588곳에 달한다는 통계청 집계에도 광주·전남도 차원의 반지하 가구 현황 파악과 안전 조치가 전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호우로 반지하 집에 살던 4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재난 대응의 문제점이

되풀이된 만큼, 수해 취약 장소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에 지자체가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전남 지하와 반지하 주택은 광주 247가구·전남 341가구로 총 588가구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서구 59곳, 북구 55곳, 동구 48곳, 광산구 44곳, 남구 41곳이다. 전남은

여수 68곳, 순천 36곳, 장흥 16곳, 담양·곡성 각 15곳 등이다.

2년 전 통계청 조사가 있었지만, 각 지자체는 최근까지 지하 가구 현황과 형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주택·5층 이하 공동 주택 중 지하층 건축물 자료만 있을 뿐 실거주 현황과 용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지하 가구 대피 등을 담은 재난(집중 호우 등) 대응 매뉴얼도 갖추고 있

지 않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역별 지하 가구를 조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지대 종합 침수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지하층에 대한 세부 매뉴얼은 없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하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2년 만에 하락세

한국부동산원 7월 동향조사 0.04% ↓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데다 거래마저 뜰 끊겨 부동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이후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결국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광주지역은 지난해 4.48%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껴가지 못했다.

광주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2억8530만원, 전세가격은 1억9062만원, 월세 보증금은 3973만원, 월세 평균가격은 58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쌓이는 이른바 ‘부동산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매매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의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이 8000여 세대에 달한 데다, 고금리 추세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재환기자**

잇단 위법 판결에도 정보공개 또 거부한 검찰

행정 편의주의만 내세워 국민 알 권리 침해...개선 시급 지적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행정 편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B·C·D씨를 무고·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B·C·D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자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던 B·C·D씨가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주장을 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옛 정보공개법,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들어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 방법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규정·규칙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A씨는 검찰의 사건기록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열람·등사를 요구했던 사

건기록(송치 의견서·증인신문조서 등)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 또는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공개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정보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기법·수사기관 내부의 판단 과정을 포함하는 정보,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일부 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 정보·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해도 사건 관계인의 비밀·자유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광주지검(지청 포함)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수사기록 목록 정보 공개를 검찰 보존 사무 규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의 위법 판결을 8차례 받은 바 있다.

검찰이 법적 효력 없는 행정 규칙 등만 앞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무신경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동취재본부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점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시장경제과 직원들이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